심사보고서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안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94
----------	-----

2017. 4. 28. (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이숙애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2017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2017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2017년 4월 21일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숙애 의원)

가. 주문

세계적인 유전자변형식품등(GMO)의 수입국가인 우리나라 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통해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해줄 것을 촉구 함.

나.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농축산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유전자변형식품등(GMO)의 수입량도 늘어나고 있음. 유전자변형 식품등(GMO)을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가 많음에도 현 기준에 저촉되지 않아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소비자들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 식품의 원재료로 유전자 변형식품등을 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 실시를 촉구 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 유전자변형식품은(GMO) 식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새롭게 조작하고 변형시켜 만든 식품으로, 해충과 질병에 강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여러 실험을 통해 생태계 파괴 및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GMO는 콩·옥수수·감자 등 50여 개 품목으로 우리나라는 GMO 수입국 1위임.
- GMO 정보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GMO 표시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표시가 제외되는 품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GMO 표시 제도는 잔류단백질 검출 여부가 기준이 아닌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한 GMO 유무를 표시하는 완전표시제 실시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안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

얼마 전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합니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면 배치됩니다.

우리 국민들 중 수입 GMO 콩과 옥수수를 직접 사서 날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입되는 GMO 원재료들 대부분이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유전자변형식품등(GMO)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제를 발판삼은 미국은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해 통과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식약처 역시 지난 2008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완전표시제는 커녕 표시제마저 무력화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 GMO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카놀라유를 먹을 때, 올리고당을 먹을 때 GMO 농산물을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것인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GMO 표시기준 고시행정 예고안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Non-GMO 표시를 하지마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이에 지난해 6월 국회의원 36명이 반대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말 한술 더 떠서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으로 Non-GMO 표시대상 품목 제한 규정을 더하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여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GMO 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 자율 Non-GMO 표시 운동의 싹을 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시를 악용해서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식약처의 오만한 처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원재료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은 사실상 식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부형제 사용량이 20%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부형제 하나만으로 국내 비의도적인 GMO 혼입치 기준인 3%를 종이호랑이로 만들어 버린 셈입니다.

식약처의 GMO 감싸기는 정도를 지나쳐 GMO 표시제 무력화는 물론 민간자율의 Non-GMO표시까지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생협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전국 최초로 운영했던 193개 ‘GMO식품 판매 제로(ZERO) 추구 실천 매장’의 문을 닫게 만들다시피 한 식약처의 무리한 단속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지금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GMO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GMO완전 표시제 정착만이 국민의 기초인권인 먹을 권리와 알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에 유전자변형식품등(GMO)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모든 식품에 그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 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7년 4월 2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